

지 정 토 론

◆ 남 부 희 (경남중재부 중재위원)

- 언론사 간 조정신청 많아, 해결방안 필요

위원회 지역중재부 중 경남중재부의 청구건수가 인구비례 전국 1위입니다. 또, 2014년 들어 특이하게도 언론사 간의 분쟁이 급증했습니다. 2014년 10월 말 현재 총 135건이 신청되었는데 그 중 40%에 해당하는 55건이 언론사 간 분쟁사건입니다. 이런 현상은 분명 재고해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적 문제를 다루는 언론매체가 다른 언론사와의 분쟁이나 다툼을 이유로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발제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언론중재위원회가 준사법기구이기는 하지만 명백한 오보가 아닌 한 사실판단이 어려울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보임을 전제로 정정보도나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언론사 측에서는 포괄적 사실보도라거나 사실로 보고 보도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신청인은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편파 보도했다고 주장합니다. 즉, 당사자의 입장이나 논증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상충됩니다. 이런 경우 중재위원회로서는 불성립으로 처리해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게 되는데 중재위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낌과 동시에 중재위원회가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한계적이다,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보도가 명백한 오보가 아닌 이상 반론보도청구권을 권장하는 편이고 또 반론보도야말로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 선진국에서도 언론보도로 인해 개인의 명예를 침해당하는 경우 반론보도청구권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자유도 신장하면서 법익 간의 충돌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론보도청구권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한 발제자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조정중재를 통한 반론권과 언론자유의 보장을 위해 저희 중재위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 김 영 주 (경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제자)

- 미디어엑세스권에 대한 새로운 인식 필요

언론사에서는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여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언론사가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취재·편집·전달할 수 있는 것이 언론자유였다면 언론사가 거대화·집중화 됨에 따라 공익보다는 사익을 위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언론자유에 대한 새로운 권리개념이 생겨났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앙·지방정부 및 공공기관들이 갖고 있는 고급 정보를 국민들이나 언론사에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념인 '정보청구권'과 소외된 공중들이 매스미디어에 무료로 접근해 자신의 생각이나 사상을 실어주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미디어엑세스권'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론권, 정정보도 등의 권리개념 역시 이런 미디어엑세스권의 새로운 형식입니다. 이러한 보도를 실어주는 것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